

# 임산부 무용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정책 현황 및 인식 분석\*

홍애령 상명대학교 · 이성철\*\* 수원대학교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된 저출산 현상에 문제의식을 갖고 기존의 임신출산 지원정책과 임산부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임산부 무용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기 위한 기초적 요구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첫째,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서울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둘째, 서울시 소재 임산부 103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임산부 4명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임산부 무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환경분석에서는 임산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 지원정책에 대한 불만족, 인터넷 자료에 의존된 임신 및 출산 정보에 한계가 드러났다. 임산부 무용프로그램에 관한 요구분석에서는 문화복지로서 정책적,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임산부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하여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임신 및 출산과정과 생태학적 체계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청되었다.

**주요어** : 임산부, 무용, 프로그램, 임신출산 지원정책, 인식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1년부터 심심치 않게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 삼포세대(三抛世代)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사회 복지 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인해, 연애·결혼·출산의 세 가지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청년 세대를 뜻하는 말이다(유정인, 박은하, 2011.05.11.). 경향신문의 <복지국가를 말한다> 시리즈에서 처음 등장한 이 단어는 언론 보도 및 미디어에서 빈번하게 거론되면서 현재 청년층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3포로는 부족해서 '5포'(3포에 내집 마련, 대인관계 포기 추가), '7포'(5포에 희망과 꿈 포기 추가), 'n포'(기타 등등 많은 것을 포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이 유행하고 고유개념처럼 여겨지는 현상은 그만큼 청년층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이다. 그간 언론을 통해 꾸준히 보도되었듯이 20~30대 청년층의 결혼율과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청년층이 지닌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곧바로 임신 및 출산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통계적 수치로도 증명된다. 통계청이 9월 28일 발표한 '2018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신생아 수는 작년 7월보다 8.2%(2400명) 줄어든 2만7000명을 기록하여 역대 최저수준을 돌파했다(홍준기, 김지섭, 2018.09.29). 사태가 이러하다보니 결혼, 임신, 출산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부모 세대들은 자녀가 결혼, 임신, 출산을 하지 않는 것에 아쉬움이나 불만을 갖게 되고 미혼인 자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8058996)

이 논문은 서울특별시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한 「2017 서울연구논문 공모전」 응모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교신저자 : oblsc@suwon.ac.kr

녀들은 부모들의 잔소리에 명절에 고향 방문을 꺼리거나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임신, 출산을 미루게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개인과 가족의 가치관 변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결혼 기피와 연기 현상,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육아지원의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도미향, 2006; 이삼식 등, 2007; 이재경, 2005).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출산지원 정책은 의료급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해산급여,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이다.

실제로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정책은 매우 방대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이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정작 청년층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다수의 임신부들은 주변의 지인이거나 인터넷 검색 및 커뮤니티, 블로그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급여 및 비용 지원으로 대표되는 정책 및 사업들은 실제로 임신부들이 원하는 복지와 괴리감이 있다. 일례로 임신 및 출산을 통해 신체적 변화와 정서적 혼란이 가중되는 시점에 이들을 위한 신체 및 정신건강을 지원해주는 검증된 무용프로그램 등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무용계에서도 임신부를 위해 특화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례는 매우 부족하다. 유럽 및 미국을 중심으로 무용지도자가 주도하여 임신부와 유아가 함께 하는 다수의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국제 지도자 양성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사뭇 대조적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기준 임신부, 임신, 무용을 주요어로 검색한 결과 6개의 학위논문과 1개의 학술논문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무용 분야의 학술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학회지 논문에서 임신, 출산은 주된 연구분야나 주제가 아님을 의미한다. 연구주제의 독창성이 중요시되는 석사학위논문에서 2010년 이후에 연구주제가 등장함에 따라 저출산의 문제가 야기된 이후 이 주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임신부를 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무용 연구는 주로 태교를 위한 심신안정, 호흡연습, 근력강화, 바른 자세 등 신체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곽현아, 2010; 김지연, 2011; 김채원, 2017; 김한나, 2010; 성은미, 2010; 여은진, 2013; 허혜란, 2012). 이상의 연구들은 주로 현실적인 임신출산지원정책이나 무용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조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임신부 각자의 요구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가 다수였다.

이에 임신부들이 무용에 활발하게 참여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사안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환경 분석과 임신부들의 인식, 요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계적인 교수설계를 통해 학습자와 학습자가 처한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구하는 교육학 및 교육공학의 일반적인 지식체계에 근거할 때 이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 이전에 시행되어야 할 필수조건이다(Dick & Carey, 1996).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정부 및 서울시의 임신출산 지원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서울시에 거주 중인 임신부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체감한 임신출산 지원정책과 무용프로그램 경험은 어떠한지,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안할 수 있는 무용프로그램의 특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탐색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부 무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및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임신부 무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환경분석으로서 임신부들이 체감하는 임신출산 지원정책의 실효성은 어떠한가?

셋째, 임산부 무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요구분석으로서 임산부들이 요구하는 무용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절차 및 단계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체육 및 무용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 연구자로서 과거에 비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임신출산 지원정책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무용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임신 및 출산 경험이 있는 본인의 경험과 주변 임산부와 가족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연구자적 관점에서 이론적 정책과 실제적 적용, 대상자인 시민의 관점이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이 정책이 효용성을 얻을 수 있겠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특히 임신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임산부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무용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요구조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문제의식을 갖게 된 2017년 7월부터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결과 도출, 수정 및 보완 단계를 마친 2018년 8월까지 1년여에 걸쳐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임신출산 지원정책과 무용프로그램 현황을 이론적, 경험적으로 조사, 분석하기 위해 연구의 절차 및 단계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이론적 고찰 단계에서는 문헌분석 및 인터넷 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진행된 임신출산 지원정책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무용 혹은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와 시행 중인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조사, 정리 및 분석하였다.

둘째, 경험적 탐색 단계에서는 설문조사, 심층면담을 통해 서울시 거주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과 보호자가 체감한 임신출산 지원정책의 효용성과 임산부 무용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 및 사업, 프로그램 대비 어떠한 것들이 보완되어야 할지를 탐색하였다.

셋째, 프로그램 방향 및 검증 단계에서는 연구자들이 이론적, 경험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들을 중심으로 연구방법 전문가 및 연구참여자 검토를 통해 전문가 회의 및 검증의 시간을 가졌다.

### 2. 자료수집

이 연구를 위한 자료는 문헌분석, 인터넷 조사, 심층면담,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를 통해 수집하였다. 첫째, 문헌분석은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문헌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서울, 여성, 임신, 출산, 육아, 문화, 복지 등을 주제로 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의 학술지검색 서비스(KISS), 구글 학술 검색(Google scholar)을 통해 학위논문 및 학술지연구,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중복되는 문건은 제외하였다. 이러한 문헌고찰은 Cooper(1989)가 제시한 4가지 문헌 고찰 가운데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용된 이론을 분석하는 ‘이론적 고찰’에 근거하여 실행하였다. 서울시 관련 자료로는 총 3,019가구 시민의 생활실태와 복지요구 변화를 통해 가구일반사항, 건강·의료, 경제활동상태, 주거, 생활비, 소득에 관한 정보와 복지서비스 이용, 서울시민복지기준 성과지표 관련 문항 등 조사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시복지실태조사 자료(2015)와 통계청의 최근 10년간 서울시 출생변화(2017) 자료를 일부 참고하였다.

둘째, 인터넷 조사에는 주로 정부 및 서울시에서 운영하여 주요 홈페이지를 우선적으로 검색하여 내용검토를 실시하였다. 참고한 사이트는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oman.seoul.go.kr>), 서울특

별시 여성보육청소년(<http://www.childcare.go.kr>),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seoul.childcare.go.kr](http://seoul.childcare.go.kr)), 국가바우처통합카드 국민행복카드([www.voucher.go.kr](http://www.voucher.go.kr)), 예방접종도우미([ip.cdc.go.kr](http://ip.cdc.go.kr)), 복지포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http://online.bokjiro.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central.childcare.go.kr](http://central.childcare.go.kr)),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www.mothersafe.or.kr](http://www.mothersafe.or.kr)),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http://www.idolbom.go.kr)), 서울시 각 구별 보건소 등이다.

셋째, 설문조사는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지의 문항을 검토한 후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탐색하고자 하는 문항(임신출산 지원정책, 문화복지 수준, 무용프로그램 요구 등)을 수정, 보완하여 5지선다형, 단답형, 개방형 설문으로 구성한 후 양적 연구를 다수 실시한 전문가의 내용검토를 거쳐 <표 1>과 같이 구성한 후 사용하였다.

표 1. 설문지의 문항 구성

구분	내용	문항 수
기본 인적 사항	성별, 연령, 직업, 가계 소득수준, 거주지 및 거주 기간, 태아 포함 자녀수, 현재 임신 주수	7
개인적 의견	임신 중 가장 어려운 점, 가장 필요한 점, 임신 및 출산 정보의 출처, 본인의 정보력 수준, 육아 휴직	7
임신출산 지원정책	임신출산 지원정책에 관한 만족도, 개선사항에 관한 의견	6
임산부 무용프로그램 체험해본 프로그램,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중요 고려사항, 무용프로그램 개설에 관한 의견		6
합계		26

설문지는 직접 방문 및 수거 등 절차가 까다로운 서면 설문보다는 핸드폰 문자 및 SNS 메시지를 통해 url을 전달할 수 있는 구글 설문을 통해 서울시 소재 임산부 103명에게 배포하였으며 전체의 95%인 98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설문조사 참여자의 기본 정보는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조사 참여자의 기본 정보 (n=98)

연령	인원 (명)	비율 (%)	직업	인원 (명)	비율 (%)	가계 소득수준	인원 (명)	비율 (%)	거주 기간	인원 (명)	비율 (%)	자녀 수	인원 (명)	비율 (%)
20~25세	6	6.1	사무직	18	18.4	월 100만 이하	6	6.1	6개월 미만	6	6.1	1명	49	50.0
			관리직	3	3.1									
26~30세	18	18.4	전문직	24	24.5	월 101~200만	12	12.2	6개월~1년	11	11.2	2명	34	34.7
			서비스직	5	5.1									
31~35세	39	39.8	판매 및 영업직	4	4.1	월 201~300만	23	23.5	1년~3년	18	18.4	3명	11	11.2
			무직	32	32.7									
36~40세	33	33.7	기타	12	12.2	월 301~400만	15	15.3	3년~5년	26	26.5	4명	4	4.1
40세 이상	2	2.0				월 401만 이상	42	42.9	5년 이상	37	37.8			
합계	98	100.0	합계	98	100.0	합계	98	100.0	합계	98	100.0	합계	98	100.0

넷째, 심층면담 참여자는 임산부로서의 속성을 가장 많이 지닌 참여자를 선택하고자 전형적 사례 선택 기법(Miles & Huberman, 1994), 그밖에 다양한 배경과 맥락을 지닌 참여자를 고르게 포함시키고자 이론적 표본추출(Strauss & Corbin, 1998)에 따라 서울시에 5년 이상 거주 중인 임산부 4명을 선정하였다(<표 3> 참조). 이들은 주로 가임 및 출산기 여성으로 분류되는 20~40대 여성이었으며,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많고 임산부로서 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으며, 서면이나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후 심층면담을 희망하는 대상 중에서 선정하였다.

표 3. 심층면담 참여자의 기본 정보

이름	연령	직업	가계 소득수준	거주지 및 기간	태아 포함 자녀 수	자녀 구성	임신 주수	면담일자
CAR	33세	전문직	월 401만 이상	노원구 6년	3명	1남2녀	32주 4일	2017.09.18
KYJ	28세	무직	월 201만~300만	중랑구 10년	1명	1녀	28주	2017.09.17
KHN	40세	사무직	월 301만~400만	송파구 5년	2명	2남	26주 4일	2017.09.21
YTY	34세	판매 및 영업직	월 201만~300만	영등포구 5년	2명	2녀	36주 1일	2017.09.22

다섯째, 전문가 회의는 연구자 및 전문가 패널 회의를 통해 전문적 의견 수집, 전사 및 분석 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결과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참여 전문가로는 경영 및 행정학 전공의 양적 연구 경험 다수의 연구자 1명, 예술 및 질적 연구 경험 다수의 연구자 1명, 서울시 거주 임신 경험이 있는 30~40대 연구자 2명이 참여하여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적 진행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3. 자료분석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의 처리는 Excel 및 SPSS를 활용하여 양적연구의 방법으로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구글 설문지를 통해 설문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응답이 누락되지 않도록 참여자들에게 강조하였으며, 정리된 자료는 Excel 2013 및 SPSS Windows 18.0을 이용하여 통계적 자료를 정리하였다.

심층면담 자료의 분석 및 해석은 현상학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전사, 코딩, 범주화, 분석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심층면담 자료를 전사 처리하여 Strauss(1987)의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 조건 매트릭스(conditional matrix)의 과정에 따라 체계화하였다. 임산부들이 필요로 하는 임신출산 지원정책, 무용프로그램의 내용, 이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개방코딩을 통해 초기 단계 수준의 범주를 구분하고 축코딩과 선택코딩을 통해 차츰 세부 범주를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Spradley(1979)의 영역 분석(domain analysis), 분류분석(taxonomic analysis), 성분분석(componential analysis)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 4. 연구의 진실성 및 연구윤리

연구의 진실성을 유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도출된 해석에 관한 내용을 참여자에게 확인하는 연구참여자 검토(member checks)를 시행하였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 단계에서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를 거쳐 설문자료 및 심층면담자료의 관리, 수집, 분석상의 오류를 줄이고 계획단계에서 설계한 연구의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Lincoln & Guba, 1985). 또한 연구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권고하고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인문사회계)를 2016년 수료하여 2019년까지 자격을 인증 받았다.

## Ⅲ. 임신출산 지원정책 현황

### 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정부는 저출산을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전에 실시하였던 인구역제정책에서 정책방향을 전환

하여, 2002년에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공론화하고 2004년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일부에서 정책으로 시작했다. 2005년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5년 단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06년 정부의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새로마지플랜’(2006)이라고도 불렸으며, 지방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초기 정부의 저출산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첫째,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둘째,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조성, 셋째,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이었다(공선희, 손승영, 안선덕, 2008). 1차 계획(2006~2010년)과 2차 계획(2011~2015년)이 실행되었으며 현재 3차 계획(2016~2020년)이 진행 중이다. 지난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 대책에만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당초 정부의 목표는 1차 계획을 통해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사회 대응기반을 구축’한 뒤, 2차 계획에서 점진적으로 출산율을 회복하고, 3차~5차 계획(2016~2030년)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었다(대한민국정부, 2015).

현재까지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15년 12월 발표되었다. 당시 제1차, 제2차 기본계획 추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에 이르고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급격해짐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험에 경계하며 이 분야에 대한 두 가지 정책방향과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 중 저출산 대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소, 둘째,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셋째, 자녀 양육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과 보육 환경을 개선, 넷째,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이다(대한민국정부, 2015). 4가지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계획된 장기 추진 방향에서는 경제, 교육, 고용 등 폭넓은 영역에서의 자구책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표 4> 참조).

표 4.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장기 추진 방향

분야	2016-2020	2021-2025	2026-2030
일·가정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육아휴직자중 남성비중 15%</li> <li>•중소기업·비정규직제도 이용 격차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육아휴직자중 남성비중 20%</li> <li>•시간선택제 전환 청구권 제도화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육아휴직자중 남성비중 25%</li> <li>•중소기업·비정규직 격차 해소</li> </ul>
보육·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맞춤형 보육 전환</li> <li>•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비율 37%</li> <li>•초등돌봄 질 제고 및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보통합 정착</li> <li>•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비율 45%</li> <li>•민간아이돌봄 등록·관리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비율 45% 이상</li> <li>•믿을 수 있는 민간아이돌봄 서비스 시장 형성</li> </ul>
사교육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유학기제, NCS 정착</li> <li>•총 사교육비 규모 17조원 (매년 2,000억원 감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유학기제, NCS 보편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능력중심 사회 전환</li> </ul>
임신·출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출산의료비 본인부담 해소, 난임지원 보편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위험임산부, 난임지원 국가책임 구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출산의료비 전제에 대한 보편적 지원 추진</li> </ul>
포용적 가족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별금지법 제정 추진</li> <li>•포용적 가족관 확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별금지법 제정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용적 가족관 정착</li> </ul>
여성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고용률 62% (OECD 평균수준 도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고용률 6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고용률 67%</li> </ul>

출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대한민국정부, 2015)

그러나 이러한 대책의 발표 이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계획의 실효성 여부는 우려의 시선을

낱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다수의 매체에서는 정부의 이런 계획들이 지난 10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반등은 커녕 계속 하락세인 사실을 지적하고, 세계금융위기 등 외부환경까지 악화되면서 초저출산현상(합계 출산율 1.3 미만)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주거지원’, ‘일-가정 양립지원’, ‘양육·교육 비용 부담 축소’, ‘임신·출산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홍진수, 2017.08.16.). 사실 이러한 공약내용은 지난 1~3차 기본계획에서도 꾸준히 나왔던 것으로 그리 새롭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2. 현 정부의 임신출산 지원정책

현재 정부는 기존의 보육·돌봄 서비스와 일·가정 양립 제도를 보완·발전시키고,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행 중이다. 우선 2016년부터 초음파,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고, 임신·출산에 수반되는 의료비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대폭 축소하였다. 2017년부터는 난임 시술비 및 검사, 마취, 약제 등 시술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포함하고, 난임 부부에 대한 의학·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대한민국 정책정보지 weekly공감, 2015.10.26.).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는 맞춤형으로 보육체계를 개편하고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양육 때문에 생기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공공성 높은 보육시설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초등 돌봄 서비스의 일환으로 부모들의 돌봄이 요구되는 초등학교 저학년, 즉 초등 1~2학년들을 위해 초등 돌봄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시간제 돌보미 등 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중소기업과 남성 지원제도로써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뱅크(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맞는 대체인력을 확보해 맞춤형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현행 1개월인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3개월로 확대해 남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3. 서울시의 임신출산 현황과 지원

2017년 1월 2일 경인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 10년간 서울시 출생변화’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서울시의 출생아 수는 83,005명으로 전년에 비해 0.8% 감소하였으며 연령별로 30대 이상의 출산율은 증가한 반면, 20대 이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5~39세 출산율이 10년 전에 비해 28.4명 증가하였으며 구별 평균 출산 연령은 서초구가 33.35세로 가장 높고, 금천구가 32.43세로 가장 낮았다(경인지방통계청, 2017).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토대를 기반으로 하여 서울시에서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다양한 영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중앙정부와는 다른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서울시만을 대상으로 한 기초적인 출산과 양육관련 정책수요조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많지 않아, 서울시민의 의식과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정책을 실행하는데 많은 정책적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 시민들이 가족 및 가정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가족과 출산의식, 일가족양립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수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행복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가족이 중요하다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중심의 가치관은 강하지만 이것이 곧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혼 여성의 3명 중 1명은 결혼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자녀가 주는 인생의 만족감과 정서적 가치는 높이 평가하고 있어 결혼 및 자녀 출산에 개인의 인식 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공선희 등, 2008).

그럼에도 서울시는 2014년 기준 출산율 0.98명으로 주요 광역자치단체들 중에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저출산 지역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장려금 정책의 시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어왔다(김민곤, 천지은, 2016).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2017년 3월 발표한 <2017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그동안 일·가족 양립을 위해 직장맘 고충해결과 여성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직장맘지원센터 설립(2012년), 행복한 놀이를 통해 영유아 및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증진하고자 서울 상상나라 운영(2013년), 일과 가족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와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설립(2014년), 저출산 대책 추진단(2015년),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2016년)를 구성 및 운영하는 등의 성과를 이끌어오고 있다(서울특별시, 서울시 교육청, 2017).

2018년 3월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8년 시행계획>에서는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주거, 일자리 지원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제공, 태어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하여, 양육의 책임을 부모에서 사회로 전환, 고정된 성역할에서 탈피하여 남성의 돌봄 참여가 가능한 환경 조성하고, 출산·양육·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라는 3가지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5개 분야 73개 사업(101개 세부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서울특별시, 서울시 교육청, 2018).

표 8. 서울시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분야	주거 (5개 세부사업)	일자리 (6개 세부사업)	(결혼·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26개 세부사업)	자녀 양육(보육) (52개 세부사업)	일·가족(생활) 균형 (12개 세부사업)
주요 추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혼부부 주택공급 대폭 확대</li> <li>•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가정친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li> <li>• 한부모 가족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li> <li>•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축하용품 지원</li> <li>•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방문간호서비스)</li> <li>• 다문화가족 출산 후 방문 멘토링 서비스 제공</li> <li>• 부모교육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000개)</li> <li>•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정·운영(25개소)</li> <li>• 우리동네 열린육아방 운영</li> <li>• 다문화가족 자녀 시간제 돌봄서비스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제도 강화</li> <li>•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li> <li>•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운영</li> <li>•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li> </ul>

출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8년 시행계획(서울특별시, 서울시 교육청, 2018, p.15)

이상에서 살펴본 정부와 서울시의 노력이 저출산이라는 장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게 될 여성 및 가족들이 그 실효성을 인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다수의 사업들은 이미 실행되고 있던 사업을 확대하거나 세분화시키고 있어 임신과 출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임신부의 삶의 질 향상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신부를 위한 무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기초토대를 마련하고자 다음의 장에서 환경분석과 요구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 IV. 임산부 무용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 1. 환경분석: 임산부들이 인식한 임신출산 지원정책의 실효성

#### 1) 낮은 수준의 만족도와 그 원인

우리나라의 임신출산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의 56.7%, 서울시의 임신출산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 역시 전체의 53.3%가 “불만족스럽다”라고 응답했다. 그 원인으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육아 및 보육서비스(50%), 임신,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충(43.3%)을 제안했다.

나라에서 저출산이라고 문제라고 많이는 나오지만 실제로 지원되는건 별로 없어요

(CAR, 2017.09.18. 면담자료)

옛날보다 많이 좋다고들 하죠. 돈도 나오고 지원도 된다는게 많으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육아 정책에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뉴스는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체감이 거의 없다시피한 느낌인건 사실이에요

(KYJ, 2017.09.17. 면담자료)

특히 임신출산을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시행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스럽다’(43.3%), ‘매우 불만족스럽다’(20%)로 나타났다.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 및 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바우처 금액의 증액’(90%), ‘바우처 사용처의 증가’(50%)를 꼽았다. 실제로 국민행복카드와 관련된 정보는 임산부들이 임신을 확인하고 가장 먼저 병원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생각보다 병원진료비로 소비되는 금액이 많고 실제로 필요한 병원비, 치료비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금액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았다.

초음파 한번 찍고 검사하고 이러니까 쪽 줄어 있는거예요. 처음에 50만원이라면 많은 줄 아는데 사용할 수 있는 데도 한계가 있고 바우처 쓴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냥 신용카드 결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CAR, 2017.09.18. 면담자료)

임신 기간 동안만 사용이 가능한 점 때문에 잔액이 남았어도 사용하지 못하거나, 실수로 바우처가 아닌 신용카드 결제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어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와 사용일자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더욱이 바우처로는 임산부들이 무용프로그램과 같은 문화 및 여가생활을 결제할 수 없고 의료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못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 2) 인터넷 자료에 의존된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정보

임산부들은 점차 변화하는 신체적 조건 때문에 정보의 습득과 공유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이 때문인지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구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친구, 부모, 선배 등 인맥을 통해’(37.9%), ‘임신 및 출산관련 커뮤니티, 블로그’(34.5%), ‘검색어를 중심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27.6%)으로 나타나 사실상 인터넷 공간을 통한 정보의 습득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의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정보력을 묻는 질문에서 ‘보통이다’(46.7%), ‘충분하다’(33.3%)로 나타나 자신의 정보력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갖고 있었지만, 정부 및 서울시의 주요 홈페이지를 알고 있거나 이용한 경험에서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90%), 국민행복카드(53.3%),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43.3%)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한된 임신, 출산, 육아 정보들은 주로 유명한 임신 및 출산관련 커뮤니티들을 통해 전달되거나 태아보험 등을 빌미로 제공되는 각종 상업성 블로그 등을 통해 습득되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정부나 서울시에서 시기별로 개발 및 보급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정부와 서울시의 행정기관 및 공적 기관들의 교육을 통해 임산부들에게 올바르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보급과 홍보가 매우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와 더불어 임산부들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 준비를 위한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곳도 부족했기에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요구분석: 임산부들이 요구하는 임산부 무용프로그램

### 1) 임산부를 위한 문화복지로서의 무용프로그램

임산부들은 임신 기간 중 어떠한 방식으로 태교를 하고 있을까? 대표적으로 경험해본 문화생활, 여가생활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임신 기간 중 체험해본 프로그램을 문자 베이비 페어(67.9%), 요가 강좌(50%), 아기용품 만들기(46.4%), 공연관람(32.1%) 순으로 나타났다. 면담 중 체험해본 프로그램이 매우 한정된 이유에 대해 문자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하고 실제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보다는 임신 및 출산용품, 사업의 프로모션으로 개설되는 프로그램이 많은 점이 아쉽다고 응답했다. 사실상 순수한 목적으로서 임산부의 문화 및 여가생활은 매우 부족한 것이다. 이들은 임산부의 문화생활 및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다수가 “부족하다”, “불만족스럽다”(46.7%)고 응답했으며,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장소’(37.9%)에서 ‘좋은 내용의 프로그램’(31%)으로 ‘신체에 무리가 되지 않는 활동’(20.7%)으로 문화생활 및 여가생활을 누리기를 희망했다. 또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66.7%), ‘산후 체형교정 프로그램’(53.3%)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

말로는 공연 보라, 좋은 것 보라 하지만 이미 아이가 있는 임산부들은 더 힘들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프로그램이나 좋은 체험들을 할 수 있는, 이왕이면 몸도 보살피고 미적 감각을 깨워줄 수 있는 거라면 더 좋죠.  
(CAR, 2017.09.18. 면담자료)

임산부들은 태교의 일환이자 본인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늘어나서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공적인 프로그램과 같이 보급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즉 태교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임산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울 수 있는 문화복지로서 문화예술, 무용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 정책적,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무용프로그램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김승권 등, 2012b)와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김승권 등, 2012a) 결과에 따르면 자녀 1인당 대학졸업까지 총 3억 896만 4000원의 양육비가 소요되고, 자녀의 취업과 결혼까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나라의 상황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현실적으로 많은 이들이 임신과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결혼-임신-출산-육아로 이어지는 삶의 고리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의 설문에서도 ‘임신 중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서 ‘신체적 변화’(체중 증가, 입덧 등) 46.7%,

‘경제적 부담’(병원비, 출산비용) 36.7%, ‘정서적 변화’(우울감, 불안감) 13.3%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변화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이와 연관된 질문인 “임산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전체의 60%가 “병원비 및 출산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선택하였으며 남편, 부모 등 가족의 지원(36.7%)이 뒤따랐다. 결국 임산부가 경험하는 생리적 변화의 폭만큼이나 경제적인 이유는 임신을 유지하고 완료하는 데에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산부를 위한 무용프로그램을 보급함에 있어 국가적, 지역차원의 정책적, 경제적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표방해야 할 것이다. 일부 임산부들은 만약 무용프로그램이 우수하다면 비용에 상관없이 수강하겠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으나 전반적인 임산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병원비, 출산비 이외의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 3) 임산부의 신체적 특성을 배려한 무용프로그램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임산부 2399명과 일반인 2070명을 대상으로 2014년 임산부 배려인식 실천 수준을 조사한 결과 임산부의 55.8%만이 임신 후 배려를 받았다고 답했으며 배려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임산부인지 몰라서’가 52.2%로 가장 많이 꼽혔다(조현미, 2015.01.02.). 한편 일반인의 경우 93.1%가 임산부를 배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임산부의 설문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국민들의 의식개선이 문제예요.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 같은 경우 남자들은 물론 일반사람들로 채워져 있으면 비켜달라고 할 수가 있나요? 길거리에서 흡연...뒤에 걷다 죄다 흡입하게 되는데 무거운 몸으로 뛰어서 피해가는 수밖에 없어요. 배가 나와 있는데도 막 치고 지나가는데 무서워서 대중교통 이용할 수나 있나요. 그래서 근거리나 걸어다닐 정도가 아니면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KYJ, 2017.09.17. 면담자료)

이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임산부들은 배를 치고 다니는 시민들 때문에 위협을 받는 경우 등을 거론하면서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원활한 출산을 위해 운동이 필요한 임산부라고 해도 원거리에서 시행되는 무용프로그램에는 참가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산부로서의 물리적 접근이 용이한 장소, 시간, 이동거리를 고려한 무용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거론되었다.

### 4) 임신 전-중-후, 임신 및 출산과정을 고려한 무용프로그램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대한민국정부, 2015)에서는 임산부 및 그 가족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그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건강과 사회환경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1차원적 접근으로는 임산부 외의 가족에게 어떠한 역할이 필요한지 그 외의 요소들은 어떠한 작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다. 임신 전, 중, 후 하나의 여성으로서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임신과 출산, 회복의 단계를 고려하여 총체적인 관점에서 임산부를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워킹맘의 경우, 이러한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비록 정부 및 서울시에서 직장 내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어떠한 직장 조건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임산부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매우 다르다.

아이를 낳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가 절박이죠 애 봐줄 사람이나 기관 없으면 결국 월급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도우미 여사님을 고용하거나 부모님께 양육 재물림이니깐요. 이런 상황에서 무용을 즐기란...

(KYJ, 2017.09.17. 면담자료)

실제로 육아휴직 사용시기에서는 전체의 58.6%가 ‘출산 1달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으로 ‘휴직 후 복직,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41.2%), ‘선임, 동료 등의 눈치’(29.4%), ‘육아휴직 기간의 업무 공백’(11.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하는 임산부들은 단축 근무와 출산 급여 지급 방식의 개선, 육아를 위한 환경으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제도의 개선을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즉 임산부에게 시간적 여유가 제공되어야 무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 5) 임산부의 생태학적 체계를 고려한 무용프로그램

지금까지 논의한 임산부 무용프로그램에 관한 요구분석의 결과와 이에 담긴 아이디어에 대한 해석은 거시적 관점에서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모형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이 모형은 한 사회에서 개인과 환경 간의 관계를 심도 깊게 주목한 이론으로 현재 사회복지학, 아동교육학, 간호학, 특수교육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1977년 학술지 논문을 통해 생태학적 이론을 처음 발표한 브론펜브레너는 1979년 저서인 『인간 발달의 생태학(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을 발표함으로써 이를 공식화했다. 그는 인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체계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 거시체계를 제시하였고, 1994년 발표한 연구를 통해 시간체계를 추가하여 개인을 둘러싼 다섯 가지 환경 체계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첫째, 미시체계(microsystem)는 가정, 학교, 또래 집단 등과 같이 개인의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 체계이다. 각 개인은 자신과 밀착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의 활동, 역할, 그리고 대인관계 유형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이 체계 속에서 부모, 친구, 선생님들은 개인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한다. 임산부는 그 활동 반경이 주로 가정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시체계와의 연결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된다. 이는 출산 후 육아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임신 자체를 꺼리는 가임기 여성들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부분이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실제 육아나 보육서비스가 정말 부족해요. 아줌마 쓰는 것도 부모님 부러먹는 것도 눈치 보이고 교육상 걱정인데 아무래도 시나 구에서 지원해주는 가정내 돌봄서비스가 늘어난다면 좋겠죠  
(YTY, 2017.09.22. 면담자료)

둘째, 중간체계(mesosystem)는 미시체계들을 연결시켜주며 미시체계 사이에서 중복되어 형성하는 대인관계를 의미한다. 가족과 학교 등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과정과 연결성을 말한다. 즉, 임산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두 가지 이상의 환경들 간의 상호관계를 말한다. 임산부의 경우, 가정과 가족 간의 관계, 가정과 직장, 동료집단과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가정, 직장, 동료집단에서 경험한 모든 활동들은 통합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게 된다.

셋째, 외부체계(exosystem)는 개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구조나 환경요소를 의미한다. 즉 개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발달의 장면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나 장면을 말하는 것이다.

출산 후 보육정책 확대 시행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줘야 해요.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는 보육이나 아이 돌보미 등의 혜택을 확대해야 엄마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엄마가 몸관리를 하고 취미생활로 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내 마음만 있어서 되는건 아니에요.  
(KHN, 2017.09.21. 면담자료)

넷째, 거시체계(macrosystem)는 개인이 소속된 사회의 문화, 이념, 제도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규범을 말한다. 거시체계는 앞서 제시한 체계들을 포함하는 신념체계 혹은 이데올로기이다. 거시체계는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법률적, 종교적, 경제적, 교육적 가치와 공공정책의 핵심을 구성하며, 개인과 직접적인 관련은 거의 없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변화를 초래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어요. 임신, 출산이 개인의 일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 될 사람들의 출산과 성장이라는 의식 없이는 그 누구도 떠맡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임산부가 출산 전, 후에 몸관리 못한다 고만 하지,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잖아요. (CAR, 2017.09.18. 면담자료)

다섯째, 시간체계(chronosystem)는 개인이나 다른 환경맥락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를 말하며, 각 체계는 시간체계, 즉 개인이나 다른 환경맥락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임산부들을 위한 무용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참여자 개인의 문제로 여길 것이 아니라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친 협력과 지원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브론펜브레너의 체계는 임산부 무용프로그램에 관한 요구분석 전체를 관통하는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특정 개인의 발달을 논할 때 반드시 환경과의 상호작용, 개인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장면, 이들 장면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러한 전 과정이 이러한 장면이 어떠한 사회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가 임산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 지역 사회, 정부 등 여러 가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다수의 임산부들이 현행 임신출산 지원정책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연계성이 낮게 접근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때문에 임산부 무용프로그램과 같은 문화복지로서 임산부의 신체적, 정서적 문화 및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활동들이 매우 부족했던 것이었다. 단순히 출산을 늘리고 임산부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정책 및 사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임산부들이 정작 요구하는 임산부 맞춤형 무용프로그램이 개발 및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의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 및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고려하고 생태학적 체계이론모형에 근거하여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 거시체계 등으로 구분하여 점진적이며 연계성을 높인 무용프로그램의 시행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 및 서울시의 임신출산 지원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서울시 거주 임산부들이 체감한 임신출산 지원정책은 어떠한지,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안할 수 있는 임신출산 지원정책이나 현실적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탐색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울시 임신출산 지원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서울시의 '2017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서울시 소재 임산부 103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시에 5년 이상 거주 중인 임산부 4명과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임산부 무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환경분석에서는 임산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 지원정책에 대한 불만족, 인터넷 자료에 의존된 임신 및 출산 정보에 한계가 드러났다. 임산부 무용프로그램에 관한 요구분석에서는 문화복지로서 정책적,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임산부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하여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임신 및 출산과정과 생태학적 체계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 임신부들의 실제적인 요구를 반영한 임신부 무용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현재까지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무용프로그램은 소수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를 위한 단발성 프로젝트에 그치거나 요가, 필라테스, 발레 등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기관 및 업체에서 임신부를 위해 개발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임신부들이 처한 환경이나 정책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체적, 정서적 측면 일부에 초점을 두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임신부들의 복지를 위한 보편적 교육을 보장하고자 지역별 임신부 무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별 임신부 무용프로그램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현재 임신부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공간은 주로 포털사이트, SNS 커뮤니티나 베이비 페어 등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들의 단점은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정보의 출처가 분명치 않으며 일정 시기가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체움직임과 무용을 원하는 임신부들이 무용프로그램이 어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설되어 있는지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일례로 서울시 여성보육청소년 홈페이지와 같은 곳의 협조를 구하여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실용성이 높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임신부들의 정보 공유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가상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양한 임신부 무용프로그램의 개발과 지도자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 임신부들이 참여하기 원하는 무용프로그램은 요가, 필라테스에 머물지 않음에도 현재까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어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은 상황이다. 이에 기존의 순수무용인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을 기반으로 유아와 임신부가 같이 참여하는 무용,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관심을 갖고 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에 힘쓸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경인지방통계청(2017). 최근 10년간 서울시 출생변화. <http://stat.seoul.go.kr/jsp3/news.view.jsp?link=1&cd=005&sr=484>에서 2018.05.15. 인출.
- 공선희, 손승영, 안선덕(2008). 서울시 저출산정책 발전방안 연구. 2008-정책개발-020.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곽현아(2010). 소프틀로지식 분만법을 통한 임신부 발레 모형개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국가바우처통합카드 국민행복카드. [www.voucher.go.kr/](http://www.voucher.go.kr/)
- 김민곤, 천지은(2016). 저출산 정책으로써 출산장려금의 정책 효과성 연구: 서울 25개 자치구들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0(2), 163-190.
- 김선자, 김현정(2009).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과제와 발전방안.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승권, 김유경, 김혜련, 박중서, 손창균, 최영준, 김연우, 이가은, 윤아름(2012a).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12-54.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박중서, 김유경, 김연우, 최영준, 손창균, 윤아름(2012b).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정책보고서 2012-88.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지연(2011). 동요를 통한 율동체조 태교프로그램 검증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대학원.
- 김재원(2017). 요추 과전만 신체변형이 있는 임신부의 근력강화와 바른 자세를 위한 발레 기본동작 수행연구. 한국무용과학회지, 34(2), 153-165.
- 김한나(2010). 한국 춤사위를 활용한 태교프로그램이 임신부의 심신안정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1-1352000-001539-13. 서울: 대한민국정부.
- 대한민국정책정보지 weekly공감(2015.10.26.). 공감여성 정책. <http://koreablog.korea.kr/778>에서 2018.05.15. 인출.
- 도미향(2006). 저출산시대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부모의 자녀양육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1(1), 93-112.
-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oman.seoul.go.kr>
- 복지로 온라인신청. [online.bokjiro.go.kr/](http://online.bokjiro.go.kr/)
- 서울특별시 여성보육청소년. <http://www.childcare.go.kr>
-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seoul.childcare.go.kr](http://seoul.childcare.go.kr)
- 서울특별시, 서울시 교육청(2017). 2017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 계획.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시 교육청.
- 서울특별시, 서울시 교육청(2018).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8년 시행계획.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시 교육청.
- 성은미(2010). 태교무용 참여에 따른 임산부의 분만 자신감 및 사회적 체형불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http://www.idolbom.go.kr/)
- 여은진(2013). 임산부를 위한 통합예술치료 태교프로그램 연구: 지역보건소 임산부 건강교육을 위하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예방접종도우미. [ip.cdc.go.kr/](http://ip.cdc.go.kr/)
- 유정인, 박은하(2011.5.11.). [복지국가를 말한다](1부)② 과부하 걸린 한국의 가족.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702&artid=20110511213908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702&artid=201105112139085)에서 2018.05.15. 인출.
- 이삼식, 윤홍식, 박종서, 장보현, 최은영(2007). 출산·양육 부담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8-06, 협동연구 2007-02-6.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인구학회.
- 이재경, 조영미, 이은아, 유정미(2005). 저출산의 젠더분석과 정책대안 연구. 서울: 대통령자문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 조현미(2015.01.02.). 임산부 10명 중 4명 자리양보 못 받아.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50102142508718>에서 2018.05.15. 인출.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central.childcare.go.kr/](http://central.childcare.go.kr/)
-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www.mothersafe.or.kr](http://www.mothersafe.or.kr)
- 허혜란(2012). 발레 수행이 임신부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홍준기, 김지섭(2018.09.29.). 출산 절벽, 예상보다 14년 빨라진다.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9/2018092900173.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9/2018092900173.html)에서 2018.10.15. 인출.
- 홍진수(2017.8.16.). 저출산·고령위 확대 개편…문재인 정부는 과연 ‘보족한 수’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160926001&code=940601#csidx37d3b90afa86797beeca27124c1664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160926001&code=940601#csidx37d3b90afa86797beeca27124c16644)에서 2018.05.15. 인출.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Dick, W., & Carey, L. (1996). *The systematic design of instruction*(4th ed). New York: Harper Collin.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The paradigm revolution*. London: SAGE.
- Spradley, J. (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Strauss, A. (1987). *Qualitative analysis for social scientist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

**Analysis on Present Policies for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Dance Programs for Pregnant Women and their Perception***Hong, Ae-Ryung Sangmyung University · Lee, Seong-Cheol The University of Suwon*

This study, noting the phenomenon of low-birth problem emerging seriously across the society, sought to grasp pregnancy/childbirth supporting policies of the government and Seoul City as well as perceptions of pregnant women. And it conducted basic demand analysis on dance programs that could be done as cultural welfare for pregnant women. As its methodology, the study firstly used, examined the precedent research of pregnancy/childbirth supporting policies and dance programs for pregnant women, major contents of 'Third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eing Society' currently operated by the government and 'Detailed Plans for Low Fertility and Ageing Society 2017' by Seoul City. Secondly, it conducted questionnaire survey among 103 pregnant women living in Seoul along with in-depth interviews with four pregnant women. As a result, the study found, in the aspect of environmental analysis for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dance programs for pregnant women, their dis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pregnancy/childbirth supporting policies, and limits of pregnancy/childbirth-related information mainly depending on internet materials. Besides, in the aspect of demand analysis, dance programs for pregnant women, as part of cultural welfare based on political and economic support, needed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program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better physical access of pregnant women reflecting their physical nature as well as their lifestyles and ecological system.

**Key words** : Pregnant women, Dance, Program, Pregnancy/childbirth supporting policies, Perception

---

논문투고일: 2018. 08. 31  
논문심사일: 2018. 10. 11  
심사완료일: 2018. 10. 21